

## "해방후 재일조선인 북송, 일본·북한의 합동작품"

"재일조선인 북송 역사 끝나지 않고 탈북자재귀국자로 돌아와"

김태홍 기자 | 2010-05-28 17:47

금인쇄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

해방이후 일본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들이 대규모 북한행을 선택한 것은 일본 정부와 북한이 합심해 준비한 프로젝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한 특별강연자로 나선 테사 모리스 스즈키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대학 교수는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 기구에 있는 공개해제된 비밀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즈키 교수는 "북한과 일본 정부간 대규모 북송사업에 대해 비밀스럽고 직접적인 협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제안을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점과 북한과 일본의 이데올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북송사업에 대해 협력을 잘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인 북송은 양국의 공동사업"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명분이 국제정치적 음모의 협조자가 됐다"며 적십자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됨을 안타까워했다.

일본은 적십자에 북송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했고 적십자는 조선인들이 일본을 떠나기 전에 자유의지를 물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렀고, 조선인들의 제3국 등 선택은 적사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북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교수는 "해방이후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들은 60만 명가량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부분 좌파성향이었고 (남한에서) 범법행위를 한 자들로 남한행을 꺼렸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조선인들의 북한행을 계획했고, 북한이 러시아·중국·일본 등에 흩어져있던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국에 요청한 것이 맞아떨어지며 대규모 북송이 감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즈키 교수는 특히 "이렇듯 많은 조선인들이 북한으로 향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부 북한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현재 일본이나 제3국을 가고자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일조선인 북송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결국 현재의 탈북자와 재귀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데일리NK(www.dailynk.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인쇄 |  맨위로

 창닫기